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김 동 환**

논문초록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지속가능 성장을 이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등 실물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성장동력산업은 리스크가 크거나 공공성이 높은 분야로 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은 내부역량 및 시장여건이 대체로 양호하고 파급효과가 균질적이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한정된 금융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의 우선순위, 방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의 기본방향은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삼되, 내부역량 및 시장여건의 정도에 따라 지원방법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주제어] 정책금융, 신성장동력산업

[경제학 문헌분류] G28, G38, L52

* 접수일(2012년 2월 27일), 1차수정일(2012년 3월 6일), 게재확정일(2012년 3월 23일)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e-mail : dhkim@kif.re.kr)

*** 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Ⅰ. 서론

과거 우리 경제는 조립·가공산업, 대형 장치산업 등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금융자원을 집중하고 대기업 주도에 의한 수출 드라이브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소재·부품산업, 내수 서비스산업 등 전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의 발전이 경시되었고, 그 결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재·부품의 수입의존 체질이 고착화되었다. 이에 따라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내 경제는 환율, 국제금리 등 대외여건의 변화에 대해 안정성과 자생력을 상실해 갔다. 한편 외환위기는 국내 금융회사와 기업에게 위험(risk)과 수익(return)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했던 반면 이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위험을 회피하고 근시안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도 미쳤다. 이는 신용경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낳으며 기업으로 하여금 실물투자를, 금융회사로 하여금 장기금융을 회피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실물투자와 장기금융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위험을 떠안아 적절하게 관리할 금융과 실물의 주체가 결여되어 혁신주도형 성장이 곤란해지고 성장동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리 경제의 구성장동력산업이 대기업 위주의 조립·가공산업, 대형 장치산업이었다면, 신성장동력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소재·부품산업, 서비스산업에 집중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바,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산업이 과연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속가능 성장”을 이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동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

1.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2009년 정부는 ‘신성장동력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가치산업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고([표 1] 참조) 7천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 펀드를 종자돈(seed money)으로 조성하였으며, 17개 산업을 보다 세분화한 62개 스타 브랜드를 선정하여 세부 산업별 육성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 후 은행을 필두로 하여 동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이 이어져 왔는데, 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 녹색금융상품(여신) 실적은 2010년 9월말 현재 8조 3,941억원에 달해 불과 1년 사이에 종자돈의 10배

를 초과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4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실적은 6조 2,002억원으로 은행권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표 2] 참조).

[표 1]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선정사유	구분
녹색 기술 산업	1.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자원위기 해결능력 및 미래 거대시장잠재력	장중단기
	2. 탄소저감에너지	기후변화 자원위기 대응, 한국 잠재력 유망	중장기
	3. 고도 물처리	녹색성장 연관성 및 미래시장 유망	중기
	4. LED 응용	에너지 절약 및 시장잠재력	중기
	5. 그린수송시스템	전후방 산업파급효과 및 세계시장 유망	중기
	6. 첨단그린도시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단기
첨단 융합 산업	7. 방송통신융합산업	국내 IT 경쟁력 및 신시장 창출	단기
	8. IT 융합시스템	주력산업(조선 등)의 경쟁력 제고	단기
	9. 로봇 응용	전후방 산업효과 및 세계시장 유망	장기
	10. 신소재 나노 융합	타산업 필수기반산업 및 신산업 창출	장기
	11.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세계 유망시장 및 신산업 창출	장기
	12. 고부가 식품산업	미래 식량자원 해결 및 고부가화	중기
고부가 서비스 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 및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	단기
	14. 글로벌 교육시스템	일자리 창출 및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	중기
	15. 녹색금융	타산업 필수기반산업 및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	중기
	16. 콘텐츠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및 세계시장 유망	중기
	17. MICE[주]·관광	일자리 창출 및 신비즈니스 모델 창출	단기

주) MICE : 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자료)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2009.5.26)

[표 2] 은행권 녹색금융상품(여신)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상품명	실적	
		('10.6월 말)	('10.9월 말)
산업	녹색산업육성특별시설자금	10,878	12,657
농협	녹색성장NH푸드론	1,357	1,733
	녹색마이너스통장	304	360
신한	신한솔라파워론	840	2,609
	신한신재생에너지대출	696	696
	신한녹색성장대출	1,272	464
우리	우리그린솔라론	747	751
	우리로봇시대론	19	19
	우리LED론	214	207
	우리 RFID/USN론	9	9
	우리사랑 녹색기업대출	490	523
SC제일	친환경 SME Loan	121	170
하나	-0.3°C 대출	385	412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솔라론포함)	1,980	400
국민	KB GreenGrowth 론	6,174	7,466
기업	태양광발전시설자금대출	1,103	1,111
	녹색성장기업대출	23,444	24,165
	녹색설비브릿지론	142	175
	IBK 녹색기업대출	(신규)	17
외환	신성장기업파트너론(녹색기업파트너론)	268	186
	준공영제CNG버스자금대출	58	62
	마이솔라파트너론	253	252
씨티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에 대한대출	1,789	1,823
수출입	수출자금,해투자금, 수입자금	15,273	19,818
대구	DGBCNG버스 구입자금대출	4	3
	DGB 그린론	10	9
	친환경기업자금대출	3	3
	DGB지속가능경영지원론	260	234
	신재생에너지부품기업 지원시설대출	100	100
부산	BS CNG버스구입자금대출	2	11
	BS클린녹색기업우대대출	326	487
광주	Hi-Green Solar Loan	234	227
	Hi-Success Loan	52	55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	2,306	1,942
	KJB GREEN LOAN	169	173
전북	JB Green Biz Loan	8	11
경남	하이테크-론	307	300
	녹색비지니스론	36	242
정책금융공사	녹색인증분야지원대출	2,812	4,059
계		74,445	83,941

자료) 구정한(2011), 내부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이렇듯 신성장동력산업의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은 것은 동 산업이 리스크가 크거나 공공성이 높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 영역에 해당하여 상업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데에 기인하는 듯하다. 여기서 공공성이 높다는 것은 동 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갖기 때문인데, 공공재가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예컨대 신상품·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할 경우 투자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과 위험은 투자자 개인이 부담하지만 투자의 결과는 당해 주체가 전유(專有)할 수 없는 관계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투자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1]. 따라서 신성장동력산업은 [그림 1]에서와 같이 협의의 정책금융 또는 광의의 정책금융 (지원대상) 영역에 속할 개연성이 높다고 하겠다. 여기서 협의의 정책금융 영역은 공공성과 리스크가 모두 높은 분야를, 광의의 정책금융 영역은 협의의 정책금융보다는 상대적으로 공공성과 리스크가 다소 낮은 분야를 의미한다.

[그림 1] 정책금융 영역 : 시장실패



자료) 김동환(2008, 2010)

신성장동력산업이 협의나 광의의 정책금융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동 산업이 어느 정도 공공성과 리스크를 지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첫째, 공공성을 외부경제효과와 공익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평가기

1) 이는 공공재가 갖는 외부성(externality), 즉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으로 인한 무임승차(free-riding)의 문제나 비경합성(non-rivalry)으로 인한 혼잡(congestion)의 문제로 인해 시장이 실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준을 마련하였다[2]([표 3] 참조). 우선, 외부경제효과는 전방산업의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응도 및 고용유발 계수를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였다[3]. 공익성의 경우 계량적 평가 자체가 어려운 관계로 사회 공익에 미치는 영향 및 국가기능 유지에 필수적인가 여부 등 비계량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리스크의 경우 신용공여 규모와 원금 회수가능성 등 계량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하였다([표 4] 참조). 다만 자료입수의 편의상 신용공여는 대출 및 회사채에 한정하고, 원금 회수가능성은 신용등급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1]에서 광의의 정책금융 I은 공공성 측면에서는 공익성보다는 외부경제효과가 높고, 리스크 측면에서는 신용공여 규모가 비교적 크거나 원금 회수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분야를 의미하며, 광의의 정책금융 II는 공공성 측면에서는 외부경제효과보다 공익성이 크고, 리스크 측면에서는 신용공여 규모가 비교적 작거나 원금 회수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분야를 나타낸다. 이하에서는 실제로 신성장동력산업이 협의나 광의의 정책금융 영역에 속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특정 정책금융기관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표 3] 공공성 평가 항목

분류	세부 항목	내용
계량 항목	감응도계수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계수
		특정 산업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로 판매가 된다면 다른 산업의 생산이 늘어날 때 동산업의 생산도 함께 늘어나는 것을 전방연쇄효과라고 하는데, 감응도 계수는 전방연쇄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냄
		j산업의 감응도계수 $= \frac{r_{i\cdot} \cdot e^{T}}{\left[\left(e \cdot r_{ij} \cdot e^{T}\right)/n\right]}$ (n은 부문수, r은 생산유발계수표, $r_{i\cdot}$는 r의 i번째 행, e는 단위행벡터)

2) 본 연구에서는 다소 자의적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을 계량적인 평가가 비교적 가능한 외부경제 효과와 계량적 평가가 곤란한 공익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여기서 후방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 즉 후방연쇄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신성장동력산업이 대개 소재나 부품산업, 서비스산업 등 전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전후방연쇄 효과를 모두 포함한 본래 의미의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하는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계량 항목	고용유발계수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의 수
		고용계수를 $l_i=L_i/X_i$ (l_i, I산업부문의 고용계수, L_i, i산업부문의 노동투입량, X_i, I산업부문의 총산출액)이라고 정의하면 $L=l^T \cdot X_i$가 되고 우변에 $X=(I-A^d)^{-1}Y^d$를 대입하면 $L=l^T \cdot (I-A^d)^{-1}Y^d$가 되는데, 여기서 $l^T \cdot (I-A^d)^{-1}$를 고용유발계수라고 함
비계량 항목	공익성	국방, 보건, 복지 등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적 산업과 연구개발 및 인프라등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산업

[표 4] 리스크 평가 항목

분류	세부 항목	내용
계량 항목	규모	신용공여 규모가 크면 리스크가 커짐
	회수 가능성	차입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으면 회수가능성이 낮음

우리나라의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이 신용을 공여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산업연관표(2008년 기준) 168부문에 따라 분류하여 각 산업(부문) i의 외부경제효과(감응도계수, 고용유발계수)와 공익성을 [표 5]와 같이 점수화한 후

$$\text{공공성}i = \alpha \times (\text{감응도계수}pt)_i + \beta \times (\text{고용유발계수}pt)_i + \gamma \times (\text{공익성}pt)_i$$

와 같은 산식에 따라 가중 합산해 본 결과 중간값이 8.1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공공성 수치인 7.0(중간값)보다 큰 것으로, 동 정책금융기관이 전반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가중치의 경우 $\alpha>\beta>\gamma$ 가정[4] 하에 임의

4) 이와 같은 가정은 공공성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감응도계수 > 고용유발계수 > 공익성의 순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는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다 외부성이 강할 것이라는 다소 자의적,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엄밀한 분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익성의 경우 외부성이 강하지만 계량적 평가가 어려운 만큼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곤란하였다.

로 $\alpha \in [1.0, 1.4]$, $\beta \in [0.9, 1.3]$, $\gamma=0.8$을 대입해 강건성(robustness)을 살펴본 후 각각의 중간값인 $\alpha=1.2$, $\beta=1.1$, $\gamma=0.8$을 적용하였다.

[표 5] 공공성 평가 점수

부여 포인트	감응도 계수
0	0.5↓
1	0.5~0.6
2	0.6~0.7
3	0.7~0.8
4	0.9~1.0
5	1.0~1.5
6	1.5~2.0
7	2.0↑

주) 168개 산업 감응도계수 평균 = 1, 중간값 = 0.735

부여 포인트	고용유발계수 (평균값 대비)
0	0.5↓
1	0.5~0.7
2	0.7~0.9
3	0.9~1.1
4	1.1~1.3
5	1.3~1.5
6	1.5~1.7
7	1.7~1.9
8	1.9↑

주) 168개 산업 고용유발계수 평균 = 0.95, 중간값 = 0.91(평균값 대비 0.96)

부여 포인트	공익성
0	없음
1	연구개발, 인프라 개발 및 투자
2	국방, 교육, 의료 등 필수 산업, 해외자원개발

한편 동 정책금융기관이 신성장동력산업에 공여한 신용(대출 및 회사채, 2010년 12월말 잔액기준)의 규모 및 신용등급에 대해 [표 6]과 같이 점수를 부여한 후

$$\text{리스크}i = \ln\left[(\text{신용공여규모}pt)_i \times (\text{신용등급}pt)_i\right]$$

와 같은 산식에 따라 각 산업(부문) i의 리스크를 평가한 결과 평균값이 2.79로 나타났다. 이때 동일한 산식에 따라 전체 산업의 리스크[5]를 평가해 보면 평균 2.1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 정책금융기관이 시중은행에 비해 리스크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신용등급은 리스크의 상대적 크기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신용공여 규모는 리스크의 절대적 크기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바, 위와 같은 산식을 채택한 것은 신용공여 규모와 신용등급이 결합된 경우라야 전체 리스크의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6]. 한편 신용등급은 개별 여신의 신용등급과 산업의 신용등급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산업 신용등급의 경우 자료입수가 곤란하였고 실무적으로도 사용빈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시중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 신용등급(회사채 신용등급)을 이용하였다.

[표 6] 리스크 평가 점수

부여 포인트	여신규모
1	50억↓
2	50억~100억
3	100억~150억
4	150억~200억
5	200억~300억
6	300억~500억
7	500억~700억
8	700억~1,000억
9	1,000억↑

주) 평균 여신 규모는 472억원

5) 이는 신성장동력산업의 리스크가 아니라 시중은행이 신용공여한 전체 산업의 리스크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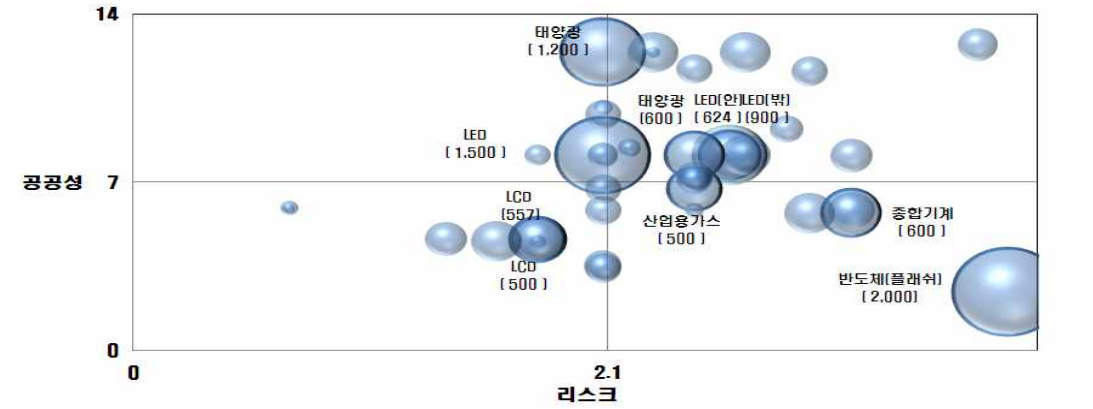
6) 처음에는 각각에 부여된 점수에 가중치를 주고 합산하여
리스크 = $\alpha \times (\text{신용공여규모}pt) + \beta \times (\text{신용등급}pt)$
와 같이 평가했으나, 신용공여 규모가 커도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상기 식과 같이 가중치를 제외하고 부여된 포인트를 서로 곱한 후 자연로그값을 취해 전체 리스크를 평가하였다.

부여 포인트	신용등급
1	AAA, AA+
2	AA, AA-
3	A+, A
4	A-
5	BBB+
6	BBB
7	BBB-
8	BB+
9	BB
10	BB-

[그림 2]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동 정책금융기관이 신용을 공여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이 대부분 협의의 정책금융과 광의의 정책금융 I 영역에 속함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2월말 현재 동 정책금융기관은 협의의 정책금융 55건 가운데 24건(금액기준 38.9%), 광의의 정책금융 I 35건 가운데 15건(금액기준 40.0%), 광의의 정책금융 II 22건 가운데 9건(금액기준 10.0%)을 신성장동력산업에 제공함으로써 주로 공공성보다는 리스크가 큰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2]는 전체 산업의 평균 리스크(2.1)와 공공성(7.0)을 기준으로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을 구분하고 있으며, 원의 크기는 신용공여의 규모(괄호 안의 수치는 억원)와 비례한다.

참고로 상기 분석 방법이 공공성 및 리스크 평가시 임의로 부여한 가중치에 대해 강건성을 유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협의의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민감도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정성적 요소가 강해 객관적 평가가 다소 어려운 공익성에 대한 가중치(0.8)는 고정하고 정량적 분석이 용이한 감응도와 고용유발계수의 가중치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해 보면, 협의의 정책금융의 수는 감응도 가중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고용유발계수 가중치가 1.1 이상이 되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한편 리스크를 $\alpha \times (\text{신용공여규모}pt) + \beta \times (\text{신용등급}pt)$로 평가하는 경우 협의의 정책금융 수는 신용공여규모와 신용등급 두 변수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바,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ln[(\text{신용공여규모}pt) \times (\text{신용등급}pt)]$으로 리스크 평가방법을 변경하였다.

[그림 2]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참고] 가중치에 대한 민감도 분석

표를 보는 방법

광의의 정책금융 II	협의의 정책금융
협의의 상업금융	광의의 정책금융 I

구분		감응도									
		1.0		1.1		1.2		1.3		1.4	
고용유발계수	0.9	11	33	20	44	20	49	20	52	20	57
		22	55	13	46	13	41	13	38	13	33
	1.0	20	44	20	47	22	55	22	58	22	61
		13	46	13	43	11	35	11	32	11	29
	1.1	22	50	22	50	**22**	**55**	23	60	23	62
		11	40	11	40	**11**	**35**	10	30	10	28
	1.2	22	50	23	51	23	57	23	60	23	62
		11	40	10	39	10	33	10	30	10	28
	1.3	23	51	23	52	23	57	23	60	23	62
		10	39	10	38	10	33	10	30	10	28

구분		신용공여규모									
		0.8		0.9		1.0		1.1		1.2	
신용등급	0.9	53	24	39	38	39	38	32	45	30	47
		31	15	23	23	23	23	17	29	17	29
	1.0	45	32	38	39	27	50	27	50	26	51
		28	18	23	23	15	31	15	31	14	32
	1.1	41	36	34	43	**27**	**50**	27	50	21	56
		22	24	21	25	**15**	**31**	15	31	9	37
	1.2	38	39	29	48	26	48	24	53	16	61
		21	25	19	27	14	32	14	32	8	38
	1.3	34	43	24	53	24	53	17	60	16	61
		20	26	17	29	14	32	9	37	8	38

2.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가능성

신성장동력산업이 지원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62개 스타브랜드를 44개로 조정한 다음 각각의 시장여건(M index), 내부역량(C index), 파급효과(Impact size)를 분석하여 동 산업의 발전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이렇듯 품목을 조정한 까닭은 62개 스타브랜드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풍력, 2차전지,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등 중요 산업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었다[7].

[표 7] 신성장동력산업의 재분류

분야		스타브랜드 (62)	본연구 분석대상(44)
녹색기술	1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 청정석탄에너지 (6)	태양광,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기물·바이오, 청정석탄에너지, 풍력 (7)
	2 탄소저감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중소형 원자로 (3)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이차전지 (3)
	3 고도 물처리 산업	스마트 상수도, 친환경 대체용수, 지속가능 물환경 (3)	스마트 상수도, 친환경 대체용수 (2)
	4 LED 응용	Eco LED, LED 스마트 모듈, LED 감성/ 웰빙 조명 (3)	LED 응용 (1)
	5 그린 수송 시스템	그린카, WISE ship, 첨단철도 (3)	그린카, WISE ship, 첨단철도 (3)
	6 첨단 그린도시	U-city, ITS, GIS,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4)	첨단그린도시, ITS, 그린빌딩 (3)
첨단융합	7 방송통신융합산업	차세대 융합 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실감 DTV 방송, 차세대 IPTV (4)	차세대 융합 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실감 DTV 방송, 차세대 IPTV (4)
	8 IT 융합시스템	지능형 그린자동차, 디지털 선박, 웰페어 융합플랫폼, 차세대 센서네트워크,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6)	지능형 그린자동차, 디지털 선박, 웰페어 융합플랫폼, 차세대센서네트워크,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6)
	9 로봇 응용	라이프케어로봇, 청정생산용 첨단제조로봇 시스템, 지속가능 사회안전 로봇 시스템, 창의적 에듀테인먼트 로봇, 고부가 의료서비스 로봇 (5)	제조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2)
	10 신소재·나노융합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L소재, 나노탄소융합소재, 기능성 나노필름,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5)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L소재, 나노소재,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4)
	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6)	바이오의약품,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제품, 의료기기(영상진단), 의료기기(일반) (4)
	12 고부가 식품산업	기능성식품, U식품 시스템, 친환경 안심식품, 웰빙전통식품 (4)	기능성식품 (1)
고부가서비스	13 콘텐츠·SW	게임, 차세대 영상뉴미디어, 가상현실콘텐츠, 창작공연전시, 융복합 콘텐츠, 공개SW, 지능형 인터페이스, 임베디드 SW, 사회안전시스템, 차세대웹(10)	콘텐츠, SW (2)
	14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1)
	15 MICE·관광		MICE (1)
	16 녹색금융		
	17 글로벌 교육서비스		

7) 이와 관련하여 산업연구원/지식경제부도 전략산업을 8개로 집중, 선택하고 있으며 범부처 재평가 작업에서도 10대 분야로 축소한 바 있다. 즉, 산업연구원/지식경제부가 선정한 8대 전략산업은 LED응용, 시스템반도체, 태양전지, 콘텐츠, 지능형그린자동차부품, 바이오의약품, 차세대 무선통신 및 디스플레이 등이며, 범부처 재평가작업에서 선정한 10대 분야는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반도체, IT융합병원, 천연물 신약 등 바이오, SW 등 문화콘텐츠, 전기차 및 기반인프라, 해상풍력, 박막태양전지, 건물효율화시스템, 물처리기술 및 시스템 등이다.

첫째, 신성장동력산업의 시장여건은 동 산업의 성장성과 규제환경 등에 각각 5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성장성 평가에는 동 산업의 2010년 세계시장 규모, 향후 10년간 세계시장 연평균 성장률을 사용하였고, 규제환경 요소로는 동 산업에 대한 국내외 지원제도 및 규제의 정도, 시장 접근성 등을 평가하였다. 둘째, 신성장동력산업의 내부역량은 국내 연관산업의 발전정도, 핵심 기술수준 등에 각각 5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국내 연관산업 발전정도는 연관산업 내 글로벌 플레이어가 있는지 여부 등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였고, 핵심 기술수준으로는 선진국 대비 국내 기업의 기술수준(3년 내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지 등), 비즈니스모델, 서비스 등을 평가하였다. 셋째, 신성장동력산업의 파급효과는 환경개선효과,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 등에 각각 30%, 40%, 3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환경개선효과는 온실가스 절대배출량과 감축효과에 각각 40%, 60%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였다. 생산유발효과는 전방연쇄효과와 후방연쇄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각각에 5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8], 융합산업이 많아 기존 산업분류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밀접한 산업을 2~3개 골라 이들의 전후방연쇄효과를 가중 평균하였다. 종합평가는 이들 세 가지 항목을 5등급으로 나누고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정량화한 것인데, 아래 표는 태양전지 산업의 평가결과를 예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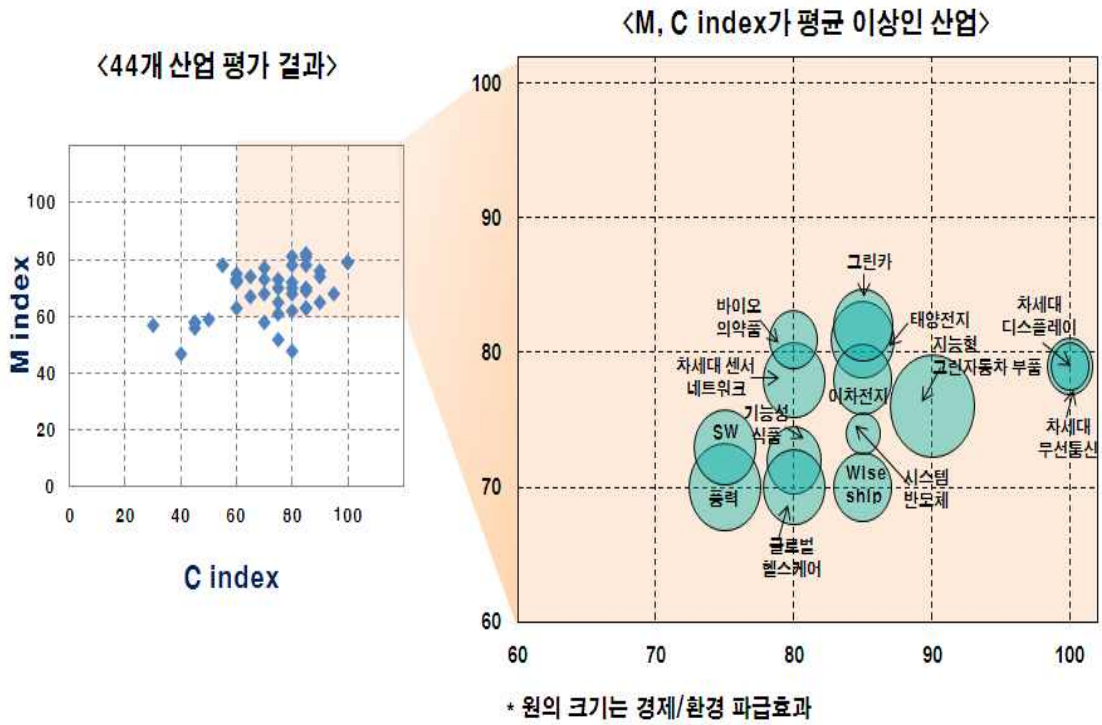
[표 8] 태양전지 산업의 발전가능성(예시)

	평가 지표		평가					설명	종합 결과
시장 여건	성장성	세계 시장 규모 (@2010)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10년 세계 태양전지 시장규모 351억 달러 추정	M index = 81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	향후 10년간 연평균 11.9%씩 성장할 전망	
	규제/ 환경	지원제도/규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보조금 지급(FIT), 의무할당제(RPS)	
		시장 접근성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상위 업체 중심 생산규모 확장, 수직계열화 움직임	
국내 산업 역량	연관산업 발전정도	연관산업 부합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반도체 산업과 유사	C index = 85
		기업 투자 여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현대중공업, OCI, 삼성, LG 등 다수 기업 투자	
	핵심 기술수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선진 업체 대비 80% 기술 수준	
경제/ 환경 파급 효과	환경개선 효과	GHG 감축효과(60%)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화석연료 발전시장 대체하여 감축효과 높음	Impact Size = 60
		GHG 절대 배출량 (40%)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폴리실리콘 제조 등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생산유발 효과	감응도 계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감응도 계수: 2.59	
		영향력 계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영향력 계수: 0.94	
	고용유발효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고용 계수: 3.9	

8) 일자리 창출에 무게중심을 둘 경우는 후방연쇄효과에 비중을 크게 두고, 중소기업 육성 등 산업의 균형발전에 무게중심을 둘 경우에는 전방연쇄효과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각각에 50%씩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역량은 30~100점까지 분포가 넓고 시장여건은 47~82점으로 집중되어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내부역량(평균 72점)이 시장여건(평균 68점)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L(Inonic Liquid) 소재, 해양에너지 등 몇 개 산업을 제외하곤 대체로 내부역량과 시장여건이 양호하고, 특히 두 가지 지표가 평균을 넘는 14개 산업의 파급효과는 44~82점으로 균질적이었다. 그 가운데 그린카, 태양전지, 2차전지, 시스템반도체, 차세대무선통신, 지능형그린자동차부품, 차세대센서네트워크, 차세대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SW 등은 10대 유망산업에 해당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산업은 내부역량 및 시장여건이 대체로 양호하고 파급효과가 균질적이어서 지속성장(sustainable growth)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가능성



다만, 상기 분석은 산업연관표(I/O)상 산업분류 코드의 매칭, 각 지표 산정의 적정성 등 몇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9]. 첫째, 신성장동력산업은 기존의 산업분류와 정확히 일치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하여 분류 코드의 객관적, 합리적 매칭방법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시장여건의 경우 성장성 지표를 산출할 때 규모와 성장률의 비중을 어떻게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환경개선 효과는 현재와 같이 파급효과 평가의 한 항목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내부역량 지표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의 경우 지금과 달리 전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 고용유발효과를 각각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취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Ⅲ.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1. 지원의 기본방향

한정된 금융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의 우선순위와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자금 지원은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정경유착 등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10]를 야기하여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납세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연성예산제약이란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조항 등이 정부 예산제약에 대한 정책 집행자의 의식을 저하시켜 비효율적 조직경영 및 과잉투자 등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경유착은 민간 경제주체의

9) 그 외에도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해 주신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연관분석표를 이용한 분석은 각 산업 투입요소의 상호연계성, 파급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연관계수가 고정되어 있는 관계로 투입요소를 변화시켜도 산업간 연관계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산업연관표를 활용하는 성과의 측정에서는 투입요소 성과의 과대 또는 과소 평가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문제점은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으로 알려져 있고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둘째,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즉 수요자 입장에서의 접근을 병행하였어야 하나,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10) 정부실패는 비대칭정보,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보완에 관한 동학적 비정합성(dynamic inconsistency), 정경유착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예컨대 신성장동력산업과 같이 외부성이 존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적 경제주체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제공받기 위해 사적비용을 과대 보고하는 인센티브를 가지나, 사적비용에 관해 비대칭정보를 갖는 정책금융기관은 높은 사적비용으로 인한 과소투자 가능성을 염려한 나머지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자금가용도나 낮은 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보완에 관한 동학적 비정합성 문제란 정책금융이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데서 시작해도 일단 정책금융에 대한 니즈가 형성되면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가장 좁은 의미의 정부실패는 정경유착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이익이 정책목적보다 우선시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완 및 선택[11]의 실패를 일컫는 것으로서, 자원배분의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을 동시에 노정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여건(M index) 및 내부역량(C index) 보다 파급효과(Impact size)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취지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고용 창출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성장동력산업은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구성장동력산업에 비해 생산유발효과나 고용유발효과가 작을 수 있다. 또한 신성장동력산업은 라이프사이클상 문제아(problem child)에 속할 개연성이 농후하고 투자 회임기간이 긴 특징을 지닐 수 있는바, 정성적 요소가 강한 M 및 C index가 높다고 해도 이에 비례하여 단기간에 지원의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장하기는 곤란하다. 이와 같은 제약을 감안한다면 파급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삼되, M 및 C index의 정도에 따라 지원방법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성장동력산업은 대기업 위주로 성장한 구성장동력산업에 비해 고용 및 신기술 창출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이 영위하거나 동 기업에 적합한 산업일 수 있는바,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산업을 우선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구체적 지원방안

첫째, M index는 크나 C index가 작은 산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R&D, 설비투자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산업은 라이프사이클상 문제아(problem child)적 성격을 지니기 쉬우며 혁신형 중소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정책금융에 의한 지원 없이는 지속성장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 산업에 대해서는 당해 또는 연관 산업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R&D, 설비투자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M index도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케팅 지원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때 마케팅 지원 방식은 운전자

11) 정책금융의 역할은 단순히 시장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수행에 필요·충분한 만큼의 자금을 공급하는 데 있는바, 이는 시장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기능을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금융은 필요·충분한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기 위해 자금지원의 규모, 방법, 대상 등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금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정책금융기관, 코트라, 대기업 등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C index는 크나 M index가 작은 산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여건의 개선을 위해 당해 또는 연관 산업의 판로 개척 및 다변화 등을 위한 마케팅 지원이 바람직하다. 동 산업은 이미 발전의 성숙단계에 도달하고 라이프사이클상 캐쉬카우(cash cow)적 성격을 지니기 쉬우며 중견·대기업에 의해 영위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금융 지원의 필요성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캐쉬카우나 스타(star)의 경우에는 상업금융기관으로부터도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산업 및 동 산업에 속한 기업(중견·대기업 포함)이 높은 내부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융합산업 등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R&D, 설비투자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셋째, 특히 C index는 크나 M index가 작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국내외 구매·판매선을 다각화하고 신제품 개발능력과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네트워크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청거래를 선호하는 주요한 이유는 매출액 변동을 줄이는 등 사업을 안정시키고, 독자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절약하며, 하청거래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R&D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메리트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산업공동화의 진전으로 하청거래선을 해외로 이전하는 대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만큼[12], 기존의 대기업-중소기업간 하청거래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기업구매자금대출, 네트워크론과 같은 네트워크금융의 지원범위를 중소·중견 구매기업으로 확대하고, 동 금융의 지원목적을 하청거래선 다각화, 독자 또는 공동의 구매·판매선 및 R&D체계 구축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지원의 목적이 중소기업 공동의 구매·판매선 확대나 공동 R&D체계 구축 등에 있을 경우 네트워크금융의 지원대상은 개별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군(cluster)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M 및 C index가 모두 크나 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 고용유발효과가 작은 산업의 경우에는 당해 또는 연관 산업에 속한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M 및 C index가 모두 큰 산업은 캐쉬카우나 스타(star)의 성격을 지니고 대기업에 의해 영위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금융 지원의 필요성은 낮은 편이다. 하지만 M 및 C index가 큰 산업에 속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하는 효과가 있어 정책금융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파급효과는 크지만 M 및 C index가 낮은 경우에는 시장여건 및 내부역량 개선의

12) 기존의 거래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구매·판매망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개발·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부당하게 이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견된다.

속도나 정도를 감안하여 지원의 방법이나 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 특성상 파급효과가 커도 M 및 C index가 낮은 경우,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생산 및 고용 증가 등)는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어도 시장여건 및 내부역량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한 지속되기 곤란하다. 따라서 비록 파급효과가 크더라도 시장여건 및 내부역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의 우선순위를 늦추거나 경기진작을 위한 단기적·한시적 지원에 머물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장기 지원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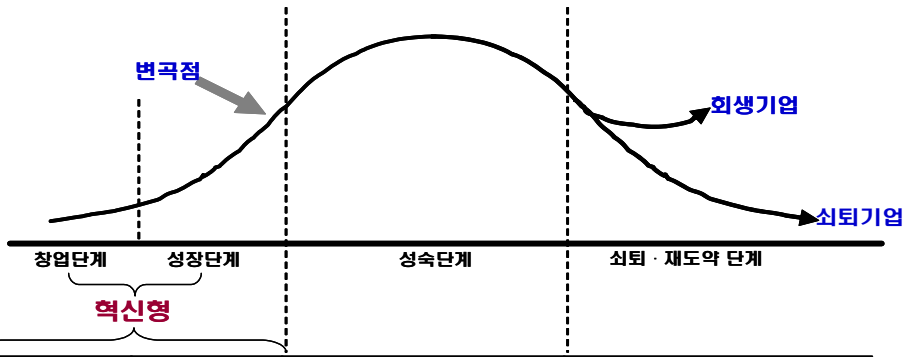
여섯째, 최근 신성장동력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감안할 때, 공정간 또는 기업간 업무 및 기술제휴, M&A 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풍력, 원전플랜트, 이차전지 등 신성장동력산업은 부품에서 완성품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누가, 먼저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하는지 여부가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조기 달성의 관건이 된다. 그리드 패리티란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기를 의미하는 바, 그리드 패리티 조기 달성에 실패하거나 경쟁상대에 뒤쳐질 경우 이들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리드 패리티 조기달성을 위한 업무 및 기술제휴, M&A 금융지원은 국내 시장의 독과점 및 이로 인한 경쟁제한, 중소기업 착취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바, 지원시 공정거래 심사를 강화하고 지원성과 공유 등을 위해 MOU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지원자금의 성격과 규모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비교적 리스크가 높은 R&D 및 설비투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창업·성장단계의 혁신형 중소기업에게는 위험중립적이거나 위험선호적 성향을 띠는 직접금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전문 재무컨설팅회사나 CB(credit bureau) 설립과 활동을 지원(등록세·법인세 등 감면, 자문·신용평가 수입에 대한 소득·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하고 외부감사나 신용평가를 희망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형 직접금융 이용도를 제고하거나, 중소기업의 우선주 발행을 장려하고 우호적 투자자 중심의 PEF를 활성화하는 등 직접금융 확대에 따른 기업의 소유권 이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내부역량은 뛰어나나 새로운 형태의 융합산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에게는 DIP 파이낸스 등과 같은 간접금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13]. DIP 파이낸스는 일반 대출에 비해 고금리, 단기, 소액의 특성을 지니게 되며 사전심사

13) DIP 파이낸스는 재건형 도산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점유채무자, debtor in possession)의 경영권을 인정하면서 동 기업의 현금흐름(cash flow)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재건형 도산절차를 밟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건신청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유동성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음의 부도나 외상매출금의 회수곤란 등으로 인해 납품업자 역시 연쇄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건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나 납품업자 등에게 유동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및 사후관리 능력이 뛰어난 은행에게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그림 4] 라이프사이클별 리스크, 필요자금의 성격 및 규모



사업위험/ROV	대	중	소	중 or 대
필요자금성격	R&D 등	설비투자 등	사업화, 조직화 등	신사업, 구조조정 등
필요자금규모	소	중	대	중

여덟째,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산 및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투융자 복합형 신용공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부동산 등 물적담보는 부족하지만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고, 미래수익의 불확실성이 높은 반면 기업가치 상승률 또한 높은 특징이 있다. 메자닌(mezzanine)은 이러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투융자 복합형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가치 변동성이 큰 동산이나 지적재산권 등은 담보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집합자산으로 등록한 뒤 양도담보,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개별 자산의 가치변동성이 큰 동산담보물을 집합자산으로 묶으면 분산투자 효과로 인해 가치변동폭이 감소함은 물론 개별 자산의 취약한 담보력을 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담보물의 소유주가 각기 다를 경우에는 집합자산의 소유권 귀속문제가 발생하는바, 채권자는 집합자산 등록시 개별 소유권의 이전가능성 등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채무자 대항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통해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MOU 체결, 등록시에는 개별 담보물의 소유주, 가치 등을 기재하여 일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여타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합자산 처분시에는 담보물의 가치에 비례하여 환가대전을 반환하면 된다. 특히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점유(유치)의 실익이 확보되기 어렵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저항감이 강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

는 등록제도를 강화하여 소유권을 보호하되, 유동성위기(채무불이행)시 국가나 공적기관이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인수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할 범정부, 국가 차원의 독립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가 크고 투자회임 기간이 긴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신성장동력산업은 특정 정부부처, 특정 정권 내에서 육성,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분산·중복된 정책금융 기능 및 조직을 지주회사 등의 형태로 단일화·체계화하여 범정부, 국가 차원의 독립기구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기구는 투자・융자・보증/보험・기술평가 등의 기능 및 조직을 통합하여 정책금융의 Head Quarter로서 위상을 갖추는 한편 민간 금융기관과의 분업구조를 확립하여 시장친화적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구정한・이석호・송민규(2010),「녹색금융 활성화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 김동환(2008),「새로운 정책금융시스템의 설계」, 한국금융연구원
3. 김동환(2008),「중소기업금융의 이해」, 한국금융연구원
4. 김동환(2010),「한국정책금융공사 비전 수립」, 한국금융연구원
5. 김현욱(2004),「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 재정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6. 지식경제부(2009), "62개 스타브랜드를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본격 추진", 보도자료
7. 한국정책금융공사(2011),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 재평가"
8. David H Scott(2007),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and Performance of State-Qwned Financial Institution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321*, The World Bank

The Role of Policy Finance in Developing New Growth Industries

Dong-Hwan Kim*

Abstract

For Korea to successfully meet today's biggest challenge of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create jobs, the role that finance plays will be important in developing the real economy, including those of new growth industries. New growth industries are often distinguished by either high investment risk or a high public services component, and are characterized by their dependence on policy finance from a lack of market funding. Thanks to their internal capacities and generally favorable market conditions,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growth for Korea's new growth industries is good. But how and in what order priorities will be set is an area that deserves careful attention in order to use the limited financial resources effectively. While short-listing the industries having the greatest ripple effect, policy financial support for new growth industry development should be flexible in allocating funds according to internal capacities and prevailing market conditions.

[Keywords] **policy finance, new growth industry**

[JEL Classification] **G28, G38, L52**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Finance (e-mail : dhkim@kif.re.kr)